

다시 확대되는 가계 · 기업간 소득 양극화

The Widening Income Growth Gap between Corporation and Household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업소득은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가계 소득이 크게 부진하면서, 가계와 기업간 소득 성장을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의 경우 가계와 기업의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은 각각 1.6%, 21%로 매우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기업소득 침체가 두드러졌던 외환위기시와는 대조적인 현상으로, 이번 침체하에서 경기침체의 타격이 가계부문에 집중되었음을 시사한다.

외환위기 이후 빈발하는 양 부문간 양극화는 격차의 규모나 지속기간, 노동소득 분배율과 같은 관련지표의 추세적 움직임 등에서 경기순환적 현상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양극화 빈발은 고용 및 임금 상승 부진과 기업의 투자 침체로 기업 소득이 가계에 원활히 환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최근의 경우 환율 효과, 감세 등으로 기업소득이 호조를 보인 반면,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악화와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가계소득이 침체된 점도 작용하였다.

가계 기업간 소득 양극화는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경기회복이나 가계부채 문제 해소, 내수 성장 등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속적인 일자리 정책의 추진과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통해 가계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기업도 가계소득 부진 속에서는 기업소득의 호조도 지속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 및 고용 확대에 나서는 자세가 요청된다.

1. 서

거시경제학 교과서의 첫부분에서 다루어지는 소득순환모형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양대부문인 가계와 기업 부문간에는 소득의 순환이 이루어진다. 기업은 생산의 주체로서 소득을 창출하고 창출된 소득은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의 형태로 가계로 환류된다. 그리고 가계는 생산요소 소득을 바탕으로 기업이 생산한 산출물을 소비한다. 이같은 소득순환 흐름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성장 과정에서 가계와 기업부문은 비슷한 소득 성장추이를 보

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장기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은행 ECOS 시스템의 가처분소득 통계가 제시되어 있는 첫해인 1975년에서 외환위기 이전까지의 가계와 기업 소득의 평균명목 증가율은 각각 18.4%, 18.5%로서 양자가 거의 같은 추이를 보인다.

하지만 소득순환 흐름에 어떤 차질이 존재하거나 혹은 일시적인 경기변동 요인에 의해 부문간 소득 추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같은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고 일시적인 현상이라 간주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해소 내지 완

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인체에서 혈류의 흐름이 원활치 못할 때 질병이 발생하듯이, 국민경제의 소득 흐름의 차질은 바람직하지 못한 병리적 현상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가계와 기업부문의 소득 추이간에 현격하거나 지속적인 차이가 나타난다면 이는 관심을 기울일 만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같은 부문간 소득 격차는 그 자체로서 소득 분배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함의를 가질 뿐 아니라 경제 성장이나 최근과 같은 경우 경기회복의 흐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시각에서 국민소득 통계를 토대로 최근 가계와 기업 소득의 증가세에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 논문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소득 격차 확대 추이를 살펴보고 이같은 격차의 원인과 정책 대응 필요 등을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2. 부문간 소득 양극화의 현황

1) 2009년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 가계 1.6% vs. 기업 21%

우리나라에서 가계와 기업간 소득 성장률 격차가 관심을 끈 것은 외환위기로부터 경제가 회복되던 2000년대 초이다. 외환위기시에는 기업

소득이 크게 침체되었으나, 이후 경기회복과 더불어 기업소득은 빠르게 반등한 반면, 가계소득은 부진이 지속되면서, 2000년대초 가계 기업간 소득양극화가 중요한 경제적 문제로 제기되었다.¹⁾ 그러던 것이 2005, 2006년에는 가계 소득 증가율이 기업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양극화가 해소되는 추이를 보였으나, 2007년 이후 최근 들어 다시 양부문간 소득 성장률 격차가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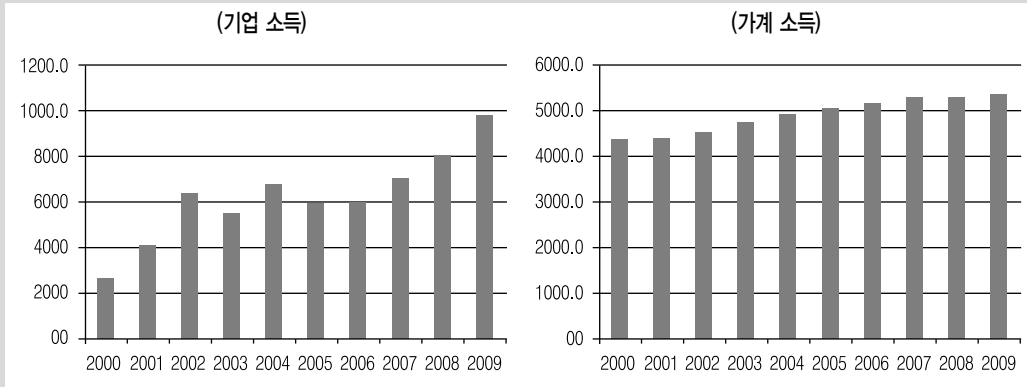
[그림 1]은 2000년 이후 기업(법인)과 가계(개인)의 실질 가처분 소득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²⁾ 그림에서 보듯 기업 소득은 2000년대초(2000~2002년) 빠른 증가세를 보인 이후, 2002~2007년간은 증가세가 완만하다가 다시 2007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09년의 기업 실질 가처분소득은 2008년에 비해 20%, 2007년에 비해서는 40%나 증가하였다. 반면, 가계 소득은 2002~2007년간은 증가 추이가 눈에 띄지만, 2000년대초와 2007년 이후는 정체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0년대초에 이어 최근 들어 가계와 기업간 소득 성장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의 경우 2007년부터 양부문간 성장률 격차가 확대 추이를 보이면서, 2009년에는 가계와 기업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각각 1.6%, 21%로 매우 큰 격차를 보였다(표1 참조).

1) 대표적인 관련논의로 한국은행, “가계와 기업의 성장양극화 현상 : 현황, 원인, 대책”, 2005.1 참조.

2) 논의에 사용된 통계는 대부분 한은 ECOS 시스템의 제도부문별 국민소득 통계를 이용하였다. 동 통계는 명목통계만 제시되어 있으며, 여기서도 횡단면적 비교의 경우에는 명목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다만 기간별 성장 추이를 아울러 살펴보는 경우에는 GNI 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 기업과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 추이

(단위: 1,000억원(2005년 불변가격))



주: 법인(금융법인 포함)과 개인의 명목가처분소득을 GNI 디플레이터로 실질화
 자료: 한국은행, 제도부문별 국민소득 통계로부터 계산

표 1.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 소득 증가율 추이

연도		'75~'97	'97~'00	'00~'05	05	06	07	08	09
명목	가계소득	18.4	4.1	6.5	4.6	4.2	4.7	5.9	3.5
	기업소득	18.5	9.6	22.5	-9.9	1.0	19.8	23.4	23.2
실질	가계소득	8.1	0.8	2.8	2.4	2.8	2.2	-0.6	1.6
	기업소득	8.2	6.0	18.2	-11.9	-0.3	17.0	15.8	21.0
증가율격차 (기업-가계)		0.1	5.2	15.4	-14.2	-3.2	14.7	16.4	19.4

자료 및 주: (그림 1)과 동일

2) 격차의 지속기간, 규모 등에서 경기순환적 현상을 넘어서는 문제

경기변동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부문간 소득 성장률이 차이를 보이는 것 자체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의 양극화는 경기변동 과정에서의 일시적, 통상적 현상으로만 간주하기 곤란한,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높은 현상이라 보여진다.

우선 외환위기 이후 양부문간 양극화가 빈발

하면서, 경기순환의 단위 사이클을 넘어서는 훨씬 긴 시간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양부문 소득 증가율이 상당히 큰 폭의 격차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2]는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양부문의 평균 소득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위기 이전에는 양부문 소득 증가율이 거의 같았으나, 위기 이후에는 기업 소득은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위기 이전보다 훨씬 급속히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부진한 증가에 그치면서 부문간 성

장률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1997~2009년의 12년간의 연평균 실질증가율이 기업소득은 13.3%, 가계소득은 1.9%로 격차가 11%p를 넘는다.³⁾ 우리나라의 공식 경기순환 주기가 53개월 정도임을 고려하면, 12년간에 걸쳐 평균 소득 증가율이 이 정도의 격차를 보인다는 것은 이 문제가 순환적 현상을 넘어서는 것임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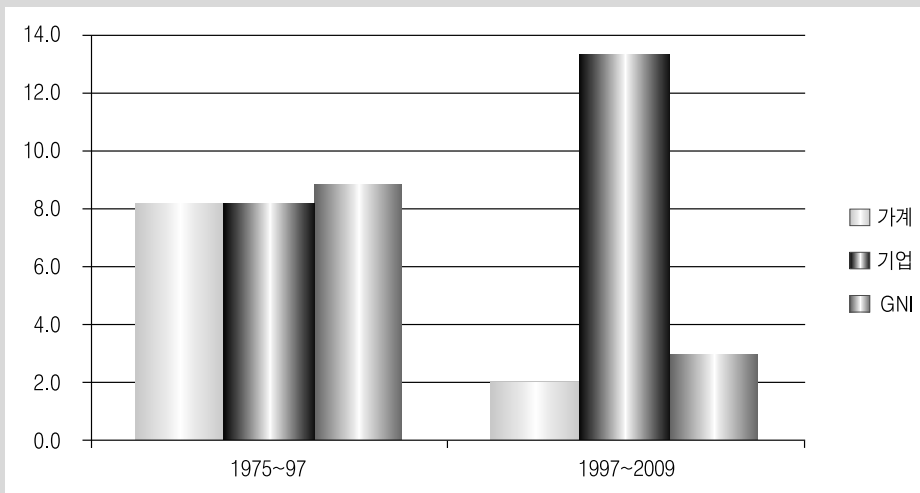
한편 소득 증가율 격차의 규모도 주목할 부분으로, 최근의 경우 2007년부터 격차가 다시 확대되면서 2009년에는 양부문간 격차가 20%p에 근접하였다. 이같은 격차는 양극화가 주요 문제로 대두되었던 2000년대초를 제외하면, 1980년대 초 이래(정확히는 1983년 이후) 기업 소득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상회한 가장 큰 폭의 격차이다. 경제가 성숙단계로 접어들어 지금과 달리 1970년대나 1980년대초는 소득 성

장률이나 그 변동폭이 지금보다는 훨씬 컸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근의 이같은 격차는 매우 큰 수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광의의 노동 분배율, 가계/기업 소득 비율은 '80년 이래 최저수준

이처럼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 양부문간 소득 성장률이 큰 격차를 보이면서, 노동분배율이나 가계/기업 소득 비율의 추이에서 추세적인 하락이 관찰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를 보면, 기업 소득 호조, 가계 소득 부진의 결과를 반영하여 가계 소득에서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소득의 비율은 뚜렷한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다. 피용자 보수와 개인 자영업 소득을 광의의 노동소

그림 2. 외환위기 전후 가계소득, 기업소득, GNI 연평균 증가율 비교



주: 실질증가율로서 가계 및 기업소득은 순가처분소득 기준

3) 외환위기의 경기침체기를 제외한 2000~09년간으로 보면, 양부문간 소득 성장률 격차는 더 벌어져 14%p에 이른다.

득으로 간주할 때, 광의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그림 3]에서 보듯 외환위기 이후, 그리고 2007년 이후 빠르게 하락하여 2009년에는 1980년 이래 최저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가계/기업 소득의 비율 역시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별다른 추세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동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하락하였고 최근 들어 추가적 하락 추이를 보이면서 2009년에는 관련 통계가 제시된 1975년 이래 최저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양극화의 경우 경기침체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기업 소득은 가계 소득에 비해 변동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경기침체하에서는 [기업소득 증가율 < 가계소득 증가율], 경기호황 국면에서는 [기업소득 증가율 > 가계소득 증가율]의 추이를 보이게 된다. 실제 우리나라의 소득 증가율 추이를 보더라도 대체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그림 5 참조). 그런데 2008년과 2009년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결과로

우리 경제가 큰 폭의 경기침체를 보인 시기였음에도 기업소득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상승기에 기업소득이 가계소득보다 빠른 증가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양 부문간 양극화가 당분간 더 지속되거나 심지어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위와 같은 특징들은 최근의 가계 기업 간 소득 성장률 격차가 단순한 경기순환적 현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일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동 문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를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3. 소득 양극화의 원인

1) 임금 및 원자재가 하락, 환율 효과, 감세 효과 등이 기업소득 호조의 원인

이 절에서는 양극화의 원인에 대해, 먼저 최

그림 3. 광의의 노동분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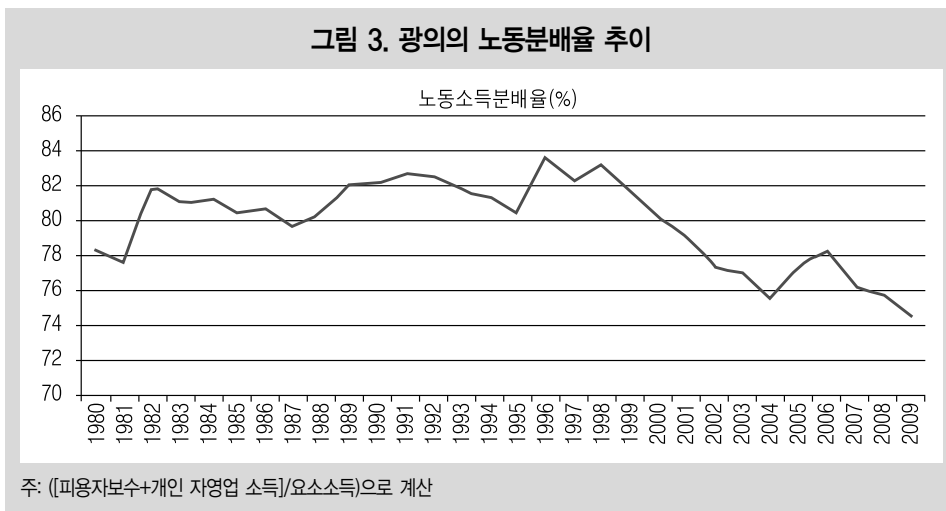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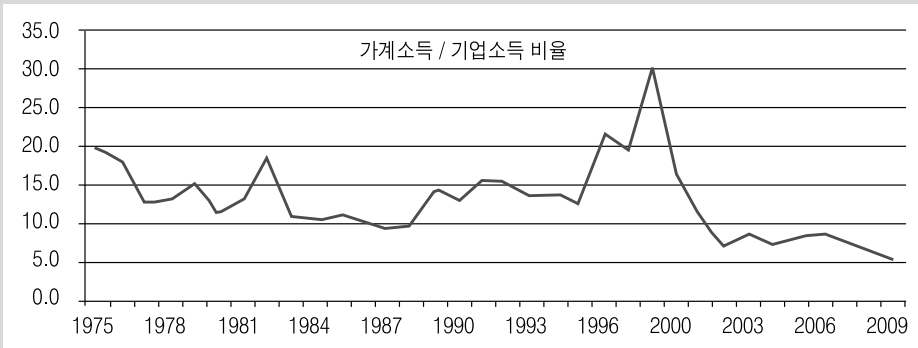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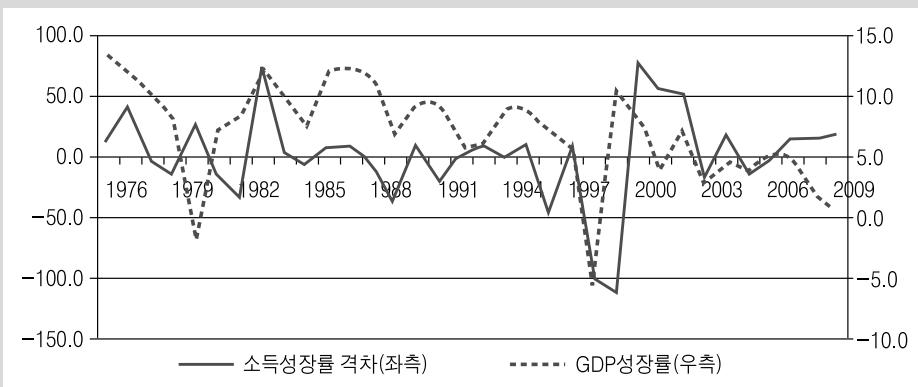


그림 4. 가계 소득/기업 소득 비율의 장기 추이



주: 기업소득이 0의 값을 보인 1998년은 제외

그림 5. 가계 기업간 소득증가율 격차와 GDP 성장률 추이



주: 소득 성장률 격차는 기업소득 증가율 - 가계소득 증가율

근의 양극화, 즉 2007년 이후 혹은 2009년의 양극화 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빈발의 배경을 논의하기로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심각한 경기침체가 있었던 2009년에 가계소득이 부진한 반면 기업소득이 호조를 보인 점은 이례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6은 기업 소득의 주요 구성항목별로 증가율과 증가 기여도를 살펴본 것이다.

2009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우선 영업잉여가 경기침체하에서도 비교적 호조를 보이고, 기업소득에 공제(負의 기여)요인으로 작용하는 순이자지불이나 순배당지불, 조세 등이 모두 감소하면서 기업 소득 호조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기침체하에서도 영업잉여가 호

조를 보인 것은 매출 부진에 비해 원가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유가 등 원자재가가 하락하고 고용부진과 임금하락으로 임금 지불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원가 하락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소득 계정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2009년의 환율 변동도 기업소득 호조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한은에서 발표한 상장기업의 기업 경영분석 자료에 의하면 2009년의 경우 전년 대비 순의환손익 증가는 매출액의 2.2%에 달하여, 환율 요인이 기업소득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세는 감세조치와 경기 침체로 기업 조세부담이 전년 대비 5.3% 감소하여 소득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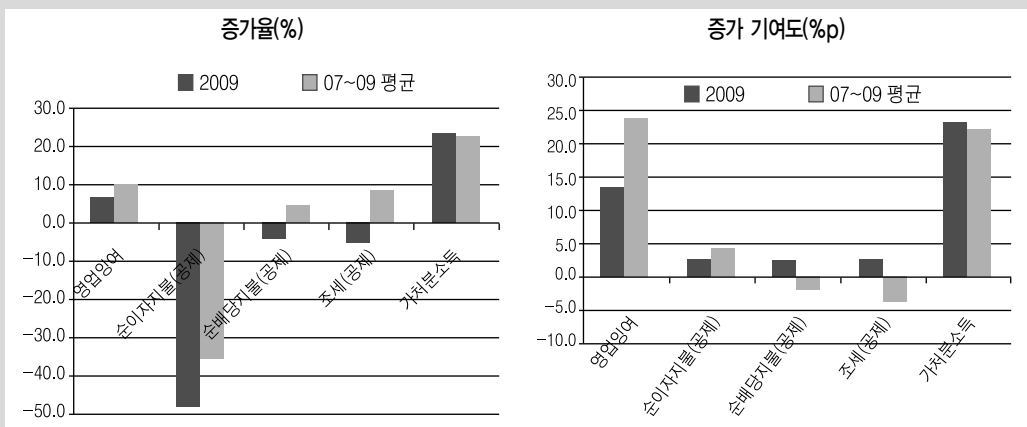
이렇게 볼 때 2009년의 기업소득 호조는 원자재가 및 임금 하락에 의한 원가 절감과 더불어 환율 효과, 조세부담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2) 가계소득 부진은 고용·임금 침체, 자영업 부진,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 등에 기인

반면 가계소득은 2009년 뿐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증가세가 부진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00~09년간의 연평균 가계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은 2.2%에 불과한 수준이다.

가계·기업간 소득 양극화가 재연되고 있는 2007년 이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계소득 부진은 고용 침체에 따른 임금 소득 부진, 자영업 침체,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 부담 확대 등이 주요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자영업 소득은 2007~2009년간 명목기준으로도 절대액이 감소하여 침체가 매우 심각함을 반영하고 있다. 자영업 소득의 감소세는 동기간중 자영업 취업자수의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소득 감소가 취업자수 감소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그림 6. 기업 소득의 주요 항목별 추이



주: 명목 기준
자료: (그림 1)과 동일

쌍방향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금 소득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차감하면 2007~2009년간 증가율이 약 2%의 낮은 수준으로, 이는 동기간중의 고용 부진(취업자수 연평균 증가율 -0.5%)에 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계 부채의 증가를 반영하여 이자지불도 동기간중 9.8%의 비교적 높은 증가를 보이면서 가처분 소득 부진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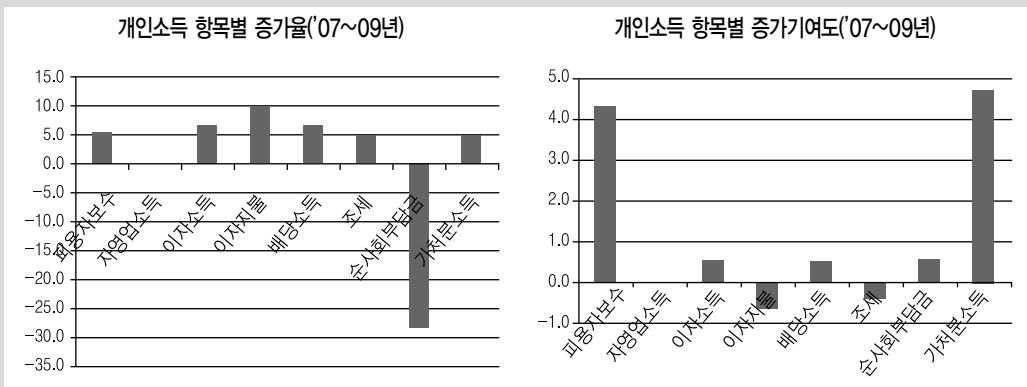
반면 2000년대 초 가계소득 부진의 원인이 되었던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소득 부진과 사회부담금 증가는 이번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2000년대초 매우 높은 증가를 보였던 순사회부담금은 2007~09년 기간중에는 오히려 감소하여 가처분 소득 증가에 기여하였다.

3) 외환위기시와는 대조적으로 금번 침체의 충격은 가계부문에 집중

이같은 2009년의 가계·기업소득 추이는 기업소득의 침체가 두드러졌던 외환위기시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외환위기시(1998년)에는 경기침체로 영업잉여가 감소한데다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과 당시의 금리 급등을 반영하여 이자지불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기업 소득의 침체를 가져왔다. 이와 달리 이번 침체에서는 앞서 보았듯이 영업잉여가 호조를 보였고 기업의 이자지불도 오히려 감소하였다. 영업잉여의 경우 외환위기시에는 경기침체가 일부 동아시아 국가에 한정되었던데 비해 이번 경기침체는 전세계적으로 전개되면서 외환위기시와 달리 큰 폭의 원자재가 하락을 수반하였던 것이 차이의 배경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기업의 부채비율이 외환위기시에 비해 크게 낮아진데다 이번 침체하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으로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기업의 이자부담이 감소한 점도 외환위기시와의 차이이다. 여기에 환율 효과나 감세 효과 등이 추가로 작용하면서 기업소득 호조에 기여하였고, 반면 경기침체로 고용과 임금은 크게 부진하면서 가계소득이 부진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외환위기시와 달리 이번

그림 7. 가계소득 주요 항목별 추이



자료 및 주: (그림 6)과 동일

침체하에서는 경기침체의 타격이 사실상 가계 부문에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빈발: 투자와 고용·임금 부진으로 인한 기업소득의 가계 환류 부진이 근본 원인

앞에서도 보았듯이 가계, 기업간의 소득 성장을 격차는 비단 2009년만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빈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찾는다면,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와 고용 및 임금 부진으로 기업 소득이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가 이전에 비해 부진한 추이를 보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같은 투자 부진은 경제성숙화에 따른 전반적

인 성장추세의 둔화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업 행태의 변화에 따른 부분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업들이 외환위기 충격을 경험하고 또 위기 이후 제도변화나 기업지배 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과거에 비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보수적 경영행태를 강화하면서 투자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외환위기 이후 기업은 창출된 이익을 투자 확대보다 현금성 자산이나 금융상품 투자,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향을 확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9에서 보듯 2000년 이후 기업 자산중 설비자산의 비중은 뚜렷이 감소하고 현금이나 금융상품 등 유동자산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고용 역시 외환위기 이후 양적 증가세에서나 질적 측면에서 대체로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고용 부진은 수출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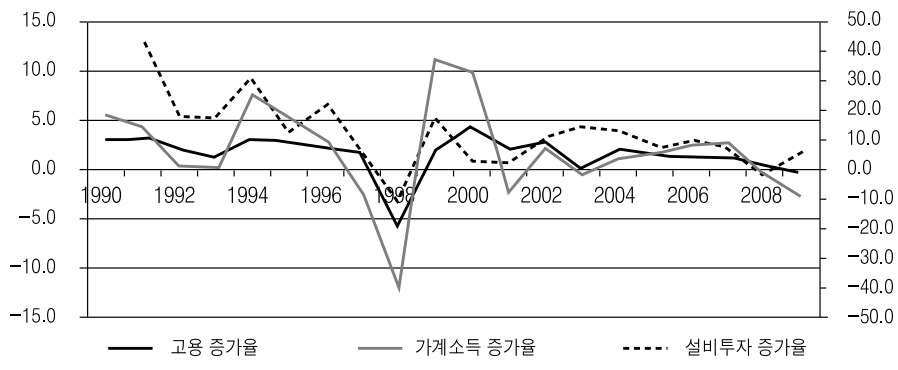
표 2. 외환위기와 이번 경기침체하에서의 기업 소득 비교

	외환위기(1998년)		금번 침체(2009년)	
	증가율	기여도	증가율	기여도
영업 잉여	-7.7	-32.1	6.3	13.3
재산소득 관련 순지불(공제)	30.9	-70.2	-7.7	4.7
[순이자 지불(공제)]	42.6	-68.1	-48.4	2.7
[순배당 지불(공제)]	2.5	-1.6	-4.6	2.5
조세(공제)	14.1	-9.3	-5.3	2.6
순가처분소득(NDI)	-123.6	-123.6	23.2	23.2

주: 1) 명목증가율 기준
 2) 기여도는 순가처분소득 증가에 대한 기여도
 자료: (그림 1)과 동일

4) 기업행태의 변화는 일정 부분 성장추세의 변화에 따른 것일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졸고(1999)에서는,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중시형 경영행태의 기업이 높은 성공을 보이고 그 비중이 확대되면서 그러한 기업행태가 지배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반면, 성장추세 둔화기에는 성장중시형 경영행태 기업의 실패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전체 기업의 행태가 좀 더 수익중시형으로 전환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강두용, "왜 고도성장경제의 기업들은 성장지향성이 강한가", 경제학연구 47(1) 한국경제학회, 1999.3 참조.)

그림 8. 가계소득 증가율과 투자 및 고용 증가율 추이



주: 1) 실질증가율 기준, 2) 설비투자 증가율은 우축

제조업의 국내 산업연관관계 약화, 중국의 부상 등에 따른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퇴조로 제조업의 고용창출능력이 크게 약화된 반면, 서비스산업 부진으로 서비스 고용도 활발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더하여 2008~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고용침체가 가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고용의 양적 부진과 더불어 비정규직 확대 추세로 임금상승율도 크게 낮아지면서 임금 소득 부진에 기여하였다. <표3>에서 보듯 피용자 1인당 실질임금 상승률은 2000년대 들어 이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4. 영향과 대응방안

1) 소득 분배, 내수 성장 및 가계부채 문제 등에 악영향

가계 기업간 소득 성장 격차가 큰 규모로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것은 소득 순환의 흐름에 차질이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 과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

우선 최근과 같은 가계 기업간 소득 양극화는 소득분배와 관련하여 부정적 함의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가계 기업간 소득 양극화가 그 자체로 소득 분배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계 소득의 상대적 부진은 가계 소득에서 지배적 비중을 차지하는 임금 소득의 부진을 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분배 악화로 연결될 개연성이 크다.⁵⁾ 앞에서 보았듯이 최근 양극화 추이 속에서 광의의 노동분배율이 1980년대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점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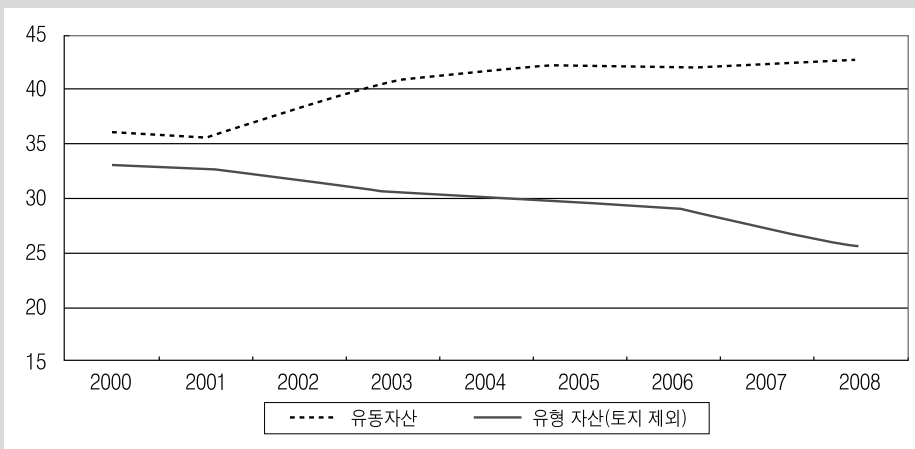
한편 동태적인 관점에서는 가계소득의 부진은 최근과 같은 경기침체하에서 소비 회복을 제약함으로써 내수나 전체 경기의 회복세 및 중장

5) 노동소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주된 소득이라는 점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락은 소득분배의 악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기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크게 증가한 가계 부채 문제가 해소해야 할 주요 과제의 하나로 남아 있는데, 가계 소득 부진은 동 문제를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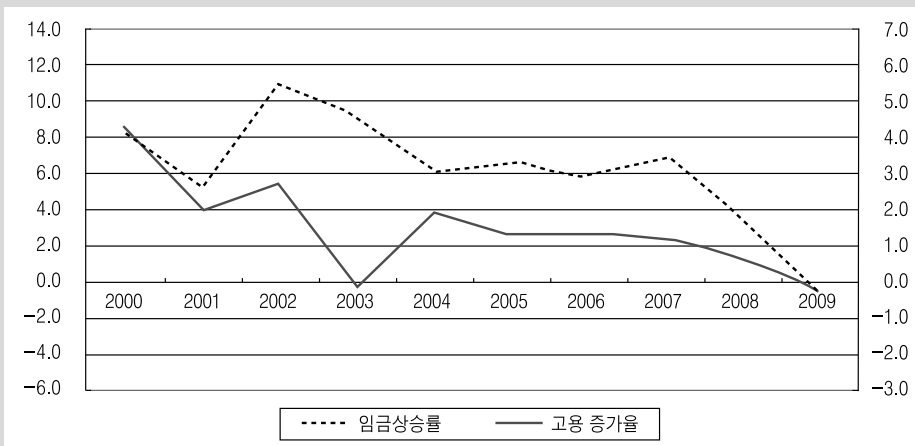
시키거나 혹은 그 해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최근 가계 소득 부진의 여파로 2009년의 경우 국내 가계 금융부채/가처분 소득 비율은 금융위기

그림 9. 기업 자산구조의 변화 추이



주: 제조업 기준이며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로부터 계산

그림 10. 전산업 고용 및 임금 추이



주: 고용은 전산업 취업자수(우축), 임금은 전산업 평균 임금(명목) 기준
 자료: 한국은행 ECOS 통계로부터 계산(고용은 통계청, 임금은 노동부 작성 통계)

직전 미국의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⁶⁾

2) 고용, 복지, 투자 측면의 정책 대응 필요

최근과 같은 가계 기업간 소득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으로서, 현정부 들어 지금까지의 경제정책 기조가 기업환경 개선에 중점이 두어져 왔다는 점에서, 향후 하반기에는 가계 부문을 좀 더 배려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수정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각론으로 들어간다면, 기업 소득이 가계로 환류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고용과 임금이라는 점에서, 가계 기업간 소득 양극화 해소에 가장 중요한 정책은 고용의 활성화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더불어 고용의 질 측면에서 비정규직의 과도한 팽창을 억제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경기회복 이후에도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구조적 고용 부진의 타개책으로서 기업 행태를 고용촉진적으로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춘 보다 적극적인 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⁷⁾ 아울러 가계 소득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OECD내에서 하위 그룹에 머물고 있는 복지지출의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 인구 고령화 추세 등에 따른 향후 복지재정 수요의 급증을 고려하여, 지출의 효율화를 아울러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활적 복지 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복지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 등을 모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더불어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다. 기업으로서도 최근과 같은 가계 소득 부진 추이 하에서는 기업 소득의 호조도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 확대에 나서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보건의

표 3. 1인당 실질 피용자 보수 증가율의 기간별 비교

기간(연도)	85~90	90~95	95~00	00~05	05~07
1인당 실질 피용자보수 증가율(%)	8.64	6.87	3.03	1.89	0.43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 및 산업연관표 고용표로부터 계산

6) 2009년의 국내 동비율은 136%로서 금융위기 직전 미국의 최고수준 137.6%에 가까운 수준이다.

7) 이와 관련된 보다 세부적인 정책 방안 논의로는 참고(“고용결정에 수반되는 외부성과 정책적 함의”, 국제경제연구 14(3), 2008.12 및 “고실업, 강한 재정제약하에서의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이슈페이퍼 2010) 참조. 동논문에서는 기업의 생산방식을 노동사용적인 방향으로 유인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는 방안을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의 사회적 가치를 기업의 고용결정에 내 부화함으로써 사회적 최적화를 도모한다는 논리에 기초하여, 피구 보조금 및 조세를 통한 방안이나, 고용바우처 거래제도 등의 방안을 통해 기업 행태를 고용촉진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